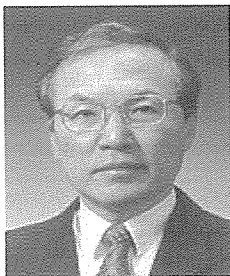


연구 평가 제도의 개혁방안

# 공정시비 많은 연구평가체계 '연계식 지원'으로 바꿔야

연구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는 대학입시제도 만큼 해당 학계에서는 심각하다. 그래서 단순히 정부투자 증대를 주창하기 전에 관리체계의 개혁을 심각히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장기간의 연구를 권장하면서도 경쟁을 유도하려면 현재의 단단계 지원방식에서 연구규모의 연계식 지원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姜周相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

##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과학기술 정책은 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정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은 산업, 국방, 복지정책 등과 깊은 연관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지구촌 사회에서 국제경쟁력을 향상토록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개발이득을 단기 이윤화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은 산업체 스스로 수행하겠지만 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은 정부 주도하에 시행되도록 올바른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

연구개발에 대한 GDP 대비 투자비

율은 선진국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며 한국도 과거 30여년간 투자규모를 늘려왔다. GDP에 대한 비율증가도 괄목할만하지만 GDP 자체의 눈부신 성장과 맞물려 과학기술 투자규모의 증가 경향은 세계적으로 손꼽힐만 하다. 그러나 단순한 투자규모의 증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이다. 특히 많은 연구개발 지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과 현재 진행중인 사회 각 분야의 각종 개혁에 비추어 연구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공공사업에서 책임소재(accountability)를 따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구개발은 다른 분야와 달리 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교량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쉽게 그 성과를 파악할 수 있겠으나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그렇지 못하다. 파급효과가 의외로 장기적이고 다방면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흔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정부지원을 받는 연구사업은 주로 대학과 출연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대된 과학기술 예산규모에 맞지 않게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공정성 시비와 능률성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연구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는 대학입시제도 만큼 해당 학계에서는 심각하다. 흔히 대형 국가 연구사업에서 극소수의 연구자들과 지원기관의 담당자들이 기획, 진행을 주도하고, 이를 지지하는 소수 인사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여론수렴이라면서 예산 당국을 납득시키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는 학문적 성취성과 사업 타당성을 무시하고 환상에 사로잡힌 수천억원대의 연구지원사업이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의문도 있다. 과학자들이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관한 충분한 학계의 여론수렴이 없기 때문이다.

## 신청연구자들 로비도 문제

복수 경쟁을 하는 BK21, 우수연구센터, 창의연구 등에서는 평가과정에서 많은 물의가 일고 있다. 특정팀에게 유리하도록 평가단을 구성한다거나 평가 원칙을 자의로 적용하여 공정하지 못한 선정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신청연구자들도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평가자를 수소문하여 사전 로비를 벌이는 극성은 지원 규모에 비하여 지나치며, 연구내용보다는 평가과정에서 눈에 잘 띄도록 신청서 작성에 신경을 더 쓰는 경향이 많다. 더욱이 언론홍보를 통하여 평가에 영향을 주려는 경우도 있다. 대형 연구

지원 사업의 최종 결정을 며칠 앞두고 어느 대학 이무개가 무엇을 개발했는데 노벨상감이라는 등 과장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연구사업의 유치경쟁 수위도 지나치다고 본다.

일단 대학에 입학하면 대개 졸업하게 되는 것처럼 한번 선정되면 지원기간이 보장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연구종료 후의 사후평가와 관리는 형식적이었다. 치열한 경쟁으로 다음 선정평가에서는 각종 요령이 큰 비중을 갖게 된다. 고교시절 착실히 공부하면 대학입시가 어떻게 무슨 상관있겠는가라고 하지만 실체는 입시만을 위한 요령이 판치는 것과 똑같다. 연구평가에 관한 관리체계는 과학기술 투자규모가 증대할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현재의 관리체계는 과거 20년간 외형만 비대해지고 절차만 복잡해졌을 뿐 큰 줄기로 볼 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그래서 단순히 정부투자 증대를 주창하기 전에 관리체계의 개혁을 심각히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이것은 현재 진행중인 사회 각 분야의 개혁 풍조와도 상통한다.

## 대형연구사업 재조정해야

우선 정부의 대형 연구지원사업은 특별히 국가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한 상세히 공개되고 충분히 토론되어야 한다. 극소수의 전문가들과 담당부처에서 진행중인 대형 연구사업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원점에서 바라보는 중간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 재조정과 같은 맥락에서 국가 대형연구사업도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리라 본다.

복수경쟁을 하는 연구지원사업의 관리체계는 보다 큰 개혁이 필요하다. 연구성격은 실로 다양하다. 연구팀의 규모가 단독연구부터 수백명에 이르기도 하고, 연구기간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계획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비는 더욱 천차만별이다. 이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 여러 연구지원기관에서 비록 사업명은 차이가 있어도 연간 천만원대, 억원대, 십억원대 등으로 다단계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시적이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9년까지 이르고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지원을 확신할 수 없기에 장기 연구계획은 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비록 연구원당 연구비는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사업(9년), 교육부의 기초과학 육성사업(5년) 등에 큰 관심이 쏠렸던 것이다.

장기간의 연구를 권장하면서도 경쟁을 유도하려면 현재의 다단계 지원방식에서 연구규모의 연계식(streamlining) 지원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기를 들자. 신규연구지원은 가장 작은 규모의 핵심연구사업에만 치중하고 핵심연구, 특정목적연구, 우수센터연구 간에 연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3년마다 중간평가를 거쳐서 일정 비율을 상향 및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핵심연구 중 우수한 몇과제는 목적기초로, 목적기초 중 우수한 팀은 우수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반대로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실통치 못한 우수센터는 부진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머

지를 목적특정연구로 하향 구성하고, 불충실한 목적특정연구도 마찬가지로 핵심연구로 축소하게 된다.

## 장점 많은 연계식 지원방식

연구팀의 연계식 연구지원 방식은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연구기간이 불특정하지만 일정한 연구성과가 있는 동안은 연구지원이 보장되며, 비록 미흡하더라도 연구팀 전체가 단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요소만 제거되어 나머지 연구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한편 연구자들은 다음 단계의 연구가 현 단계의 연구결과에만 의존하게 되므로 연구비 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연구수행 자체에 전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연구 실행자가 자연스럽게 도입될 것이다. 그리고 분야와 주제에 적합한 전국적인 허부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연계식 연구지원제도는 연구지원기관 자체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 연구지원 규모가 증대하면서 이를 심사, 평가하는 행정업무도 폭주하여 상대적으로 지원기관의 운영규모가 커졌다. 연구지원기관 자체의 운영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사업의 입장에서는 간접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계식 연구지원체계를 통해서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은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지원기관 자체는 간소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지원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래 방식의 효율성은 한계시점에 이르렀고 우리가 새 천년에 또 도약을 하려면 연구규모의 다단계 지원방식에서 연계식 지원방식으로 바꾸어 경영 합리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⑤7